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보도자료

2021. 6. 7.(월)

춘천지방검찰청
전문공보관 김경우
전화 033-240-4320
팩스 033-240-4372

강원경찰청
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 승봉혁
전화 033-248-2085
팩스 033-246-0985

제 목

前 □□군수 부동산투기 사건 수사결과

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(제11조 제1항)

- 2021. 6. 7. 춘천지방검찰청 부동산투기사범 전담수사팀(수사팀장 부장검사 서창원)과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(수사대장 경정 승봉혁)는,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'춘천-속초 동서고속화철도'의 노선과 역사위치 등에 대한 비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□□역 조성예정지 인근 토지를 취득(시세차익 약 1억 8,000만 원)한 前 □□군수 A△△(68세)를 부패방지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였음
- A△△이 취득한 부동산은 몰수 보전조치하였고, 유죄 확정 후 공매 등을 통해 수익 전액을 국고에 귀속시킬 예정임
- 춘천지방검찰청과 강원경찰청은 '21. 3. 말부터 부동산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편성하여 운영하면서 부동산투기 사건 관련 핫라인을 구축한 이후 간담회 등을 개최하고 수사상황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협업하고 있음
- 향후에도 춘천지방검찰청과 강원경찰청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하여 부동산 투기사범을 엄단할 예정임

1

공소사실 요지

-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(부패방지법위반)
□□군수로 재직 중인 '14. 6.경 '춘천-속초 동서고속화철도' 노선 발굴
용역을 진행하던 주식회사 B社의 COO로부터 위 철도의 노선과 역사 등에
대한 미공개정보를 지득한 후, '16. 7. 1. □□역 조성예정지 인근 토지
(田, 1,432m²)를 1억 6,400만 원에 매수

2

수사 경과

- '21. 3. 23. 강원경찰청, 내사 착수
- '21. 4. 1. 및 19. 춘천지검·강원경찰청, 간담회 개최
- 본건을 포함한 각종 부동산투기 사건 관련 상시 협의, 주요 진행현황
공유 및 각종 영장에 대한 신속 검토 등 의견 교환
- '21. 4. 3. A△△ 주거지 등 압수수색 실시
- '21. 5. 11. 춘천지검, 구속영장 청구(강원경찰청, 구속영장 신청)
- '21. 5. 13. 춘천지법, A△△ 구속영장 발부
- 수사팀 검사가 법원의 구속전피의자심문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증거관계
및 구속 필요성에 관하여 의견을 피력하고 PPT 형식의 의견서 제출
- '21. 5. 17. 춘천지법, A△△ 취득토지에 대한 몰수 및 부대보전 결정
- '21. 5. 21. 강원경찰청, 사건 송치
- '21. 5. 21.~ 6. 4. 춘천지검, 보완수사
- '21. 6. 7. 춘천지검, A△△ 구속 기소

3

수사 결과 및 향후 계획

- 본건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업무수행 중 취득한 철도의 노선 및 역사 등의 정보를 이용하여 인근 부동산을 매수한 내부정보 이용 공직자 부패범죄임
 - A△△은 ‘춘천-속초 동서고속화철도’의 노선 발굴 등 용역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듣기 위해 피고인을 방문한 국토교통부 용역직원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위 철도의 노선과 역사 위치 등에 대한 정보를 지득하고, 그 인근에 있는 본건 부동산을 취득
 - A△△의 부동산 취득 이후 공시지가 2~3배 상승
- 춘천지방검찰청과 강원경찰청은 본건 수사 초기부터 긴밀한 협의 등을 통해 엄정한 수사를 진행하였고, 사건 송치 이후에도 충실한 추가 조사 및 법리검토 등을 통해 A△△을 구속 기소하였음
- A△△이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몰수보전 조치하였으며, 유죄 확정 후 공매 등을 통해 수익 전액을 국고에 귀속시켜 범죄수익 환수할 예정
- 향후에도 춘천지방검찰청과 강원경찰청 등은 적극 협업하여 공직자가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이용하여 사익을 취득하는 부패범죄를 엄단하고 그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하여 환수할 예정 ☐